

◎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-283호

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규정변경안」을 공고합니다.

2015년 11월 6일

금융위원회

1. 개정 이유

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는 금융당국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업무 중 하나로 금융기관의 영업과 임직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바, 제도의 합리성 및 절차적 정당성 제고를 위하여 규정개정을 추진

2. 주요내용

가. 경영유의·개선사항 이행부진시 제재 금지(안 제15조)

- 1) 그간의 내규·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제재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필요
- 2)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 중 경영유의·개선사항은 행정지도에 해당하므로 이행부진 등을 이유로 한 제재의 금지를 규정화함

나. 임원 해임권고시 직무정지 병과 근거 신설(안 제18조)

- 1) 현행 규정은 임원 해임권고시 금융회사가 즉시 해임하지 않을 경우
임원 역할 수행 등으로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
- 2) 해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임원 해임권고시 ‘직무정지’를
병과할 수 있도록 함

다. 임원 연속 위반행위 합산 제재를 위한 근거 신설(안 제18조, 제19조)

- 1) 현행 규정은 검사시 종전 회사에서의 위법사실이 발견되어도 해당 검사
대상기관 재임시 위법 행위만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한계에 노출됨
- 2) 임원(미등기 임원 포함)제재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과거 재직하였던
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(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)를
고려하여 제재*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

* 개정안 시행일 이전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의 행위는 제외하도록 부칙에 규정

라. 법규 위반 관련 확약서·양해각서 체결 추가 근거 마련(안 제20조의2, 제24조)

- 1) 현행 확약서·양해각서 제도는 경영상 취약점 개선에 한정되어
법규 위반시 자체시정이 합리적임에도 제재를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
- 2)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필요시 확약서·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자율
개선을 유도하고, 미이행시 가중사유로 감안하여 제재수위를 상향

마. 기관제재에 경합가중제도 도입 근거 신설(안 제24조, 제24조의2, 제25조)

- 1) 금융회사가 다수의 기관제재 대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경합가중하지
아니하여 위반정도에 비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

- 2) 동일한 검사에서 동일한 제재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4개 이상
경합시 제재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*

* 개정안 시행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부칙에 규정

- 3) 제24조(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가중) 중 임원제재의 가중 규정을 분리
하여 제24조의2를 신설하고, 직원제재의 가중 규정은 제25조
(직원제재의 가중 및 감면)로 이동함

바. 기타 감독기관 제재에 대한 가중·감면제도 개선(안 제26조)

- 1) 현행 규정은 제재주체에 따라 제재대상자에 대한 제재수준이
달라져 제재의 형평성 및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
- 2) 제재주체와 관계 없이 기타 감독기관*의 기존 제재를 고려한 가
중·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**

* 신탁법에 따른 신탁중앙회(조합 및 그 임직원에 대한 검사·제재) 등

** 개정안 시행일 이전의 기타 감독기관 조치로 인하여 제재가 가중되는 경우에는
적용하지 않도록 부칙에 규정

사. 여신관련 내규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삭제(안 제27조)

- 1) 현행 규정은 내규에 사실상 법규성을 부여함으로써 법치행정의
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

- 2) 법규에 근거 없는 여신관련 내규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삭제함

아. 금전제재 관련 가중·감경기준 합리화(안 별표 2 제5호, 별표 3 제4호, 제5호)

- 1) 금전제재 부과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 현행
가중·감경제도를 개선할 필요

- 2) 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자율성·책임성 제고
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가중·감경 근거를 마련함

3. 의견제출

동 일부규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: 금융제도팀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www.fsc.go.kr /지식마당/법령정보/규정변경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 :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

(주소 : 100-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)

- 전 화 : 02-2156-9683
- 팩 스 : 02-2156-9729
- 이메일 : ypyunglee@korea.kr